

**KRIEA**

ISSUE PAPER

# 자치단체 스마트도시 서비스 동향 분석

스마트도시연구실

# 자치단체 스마트도시 서비스 동향

주 용 환 책임연구위원

스마트도시는 뉴노멀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을 통하여 사회 및 경제 부문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혁신 성장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부문 이외에도 민간의 기업, 대학, 시민단체 등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들은 인구 감소, 도시 경쟁력 약화,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스마트도시로의 전환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내용을 반영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러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구축으로 차별화된 스마트도시를 조성 중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마트도시의 도입 단계인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통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도시 종합포털(<https://smartcity.go.kr/>)’에 공개되어 있는 10개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서의 도입 혹은 구축 예정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살펴보았다.

##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범위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진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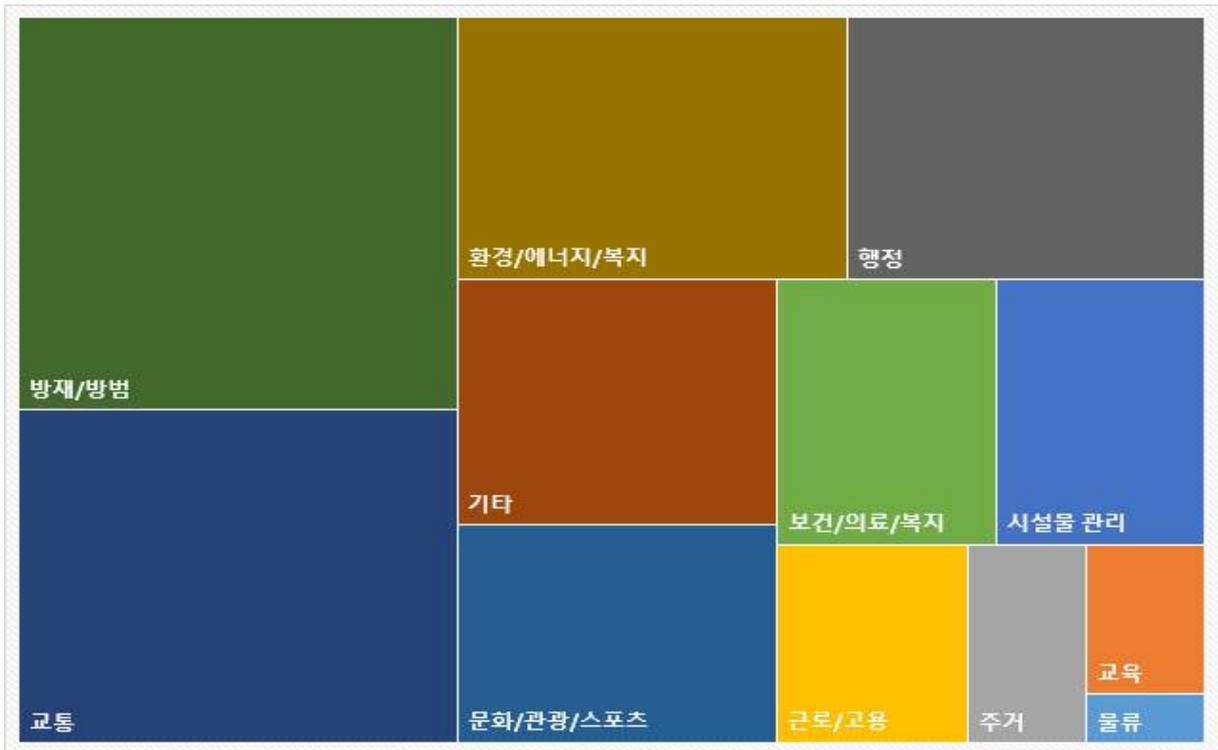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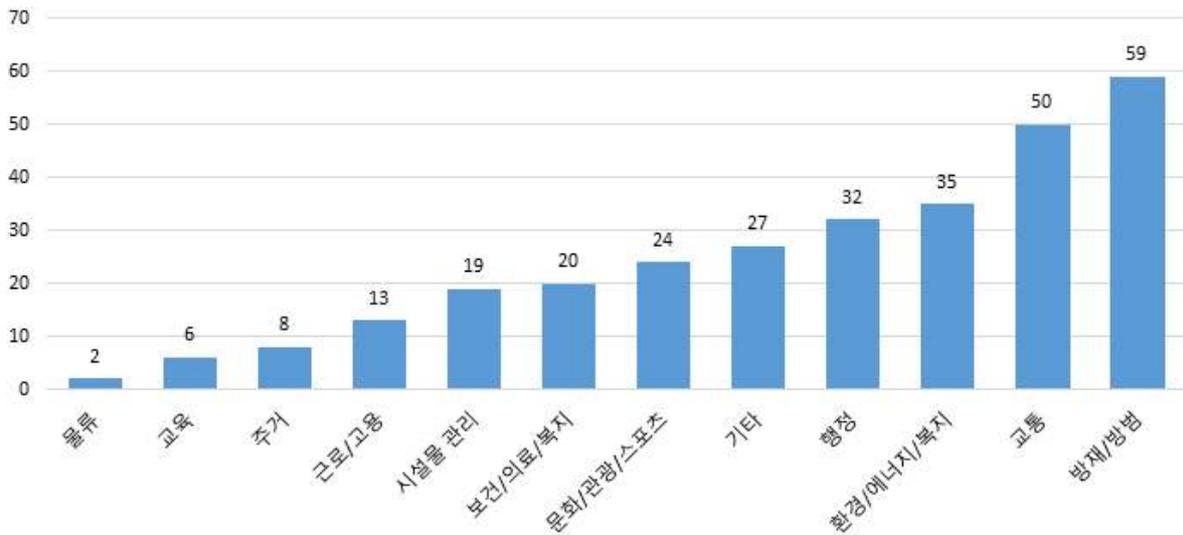
분야	개념
행정	스마트 기술과 행정업무를 접목시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장행정지원, 도시경관관리, 원격민원행정, 생활편의, 시민참여 등이 포함됨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교통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중 교통망 확충 및 지능형 교통 정보망 구축을 통한 보행 친화 환경 지향하는 서비스로 교통관리최적화, 차량여행자 부가정보, 대중교통, 차량도로첨단화, 택시콜 등이 포함됨
보건/의료/복지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의료와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건소서비스, 장애인지원서비스, 출산 및 보육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됨
환경/에너지/수자원	센서 등을 이용하여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 전달과 경보,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오염관리서비스, 폐기물관리서비스, 신재생에너지서비스 등이 포함됨
방법/방재	CCTV와 센서, 모바일,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범죄 우발지역 및 재난 요소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로 공공안전, 화재관리, 사고관리, 통합재해관리 등이 포함됨
시설물 관리	RFID, 센서, GIS 등에서 수집된 정보로 도시 기반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도로시설물관리, 건물관리서비스, 하천시설물관리, 지하공급시설물관리, 데이터관리및제공 등이 포함됨
교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성과 공간초월성을 이용하여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유치원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도서관서비스, 장애인학습지원 등이 포함됨
문화/관광/스포츠	문화 행사와 관광지 안내에 대한 서비스로 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문화시설관리, 문화공간체험, 관광정보안내, 공원, 놀이터, 리조트, 스포츠 등이 포함됨
물류	RFID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의 이동사항, 물류의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생산이력추적관리, 물류센터, 운송, 배송, 유통이력추적조회, 매장, 쇼핑 등이 포함됨
근로/고용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재택근무와 같이 물리적인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 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서비스로 교통정보서비스, Smart Work 서비스 등이 포함됨
주거	주거환경에 IT기술인 IoT, 센서, 홈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거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로 스마트홈 등이 포함됨
기타	위에서 설명하는 서비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사용자들의 편의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단지관리서비스, U-Artifact 서비스, U-테마거리서비스 등이 포함됨

## 스마트도시 서비스 유형별 현황

10개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295개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방재/방법을 위한 서비스가 59개(20.0%)로 가장 많고, 물류 서비스가 2개(0.7%)로 가장 적었다.



## 유형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석

### ▶ 방재/방범 서비스

재해와 범죄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큰 역할 중 하나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민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가고 있지만, 방재/방범 서비스는 여전히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적 서비스이다. 때문에 여러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에서 방재/방범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재/방범 스마트도시 서비스들 대부분 일반적인 방재/방범 행정 서비스와 달리 대상을 특정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능정보기술의 발달을 계기로 보편적이며 통일적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던 기존 행정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기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경우와 달리 최근의 지능형 CCTV를 이용한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의 인지대응, IoT를 이용한 어린이,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p>스마트슈즈 '꼬까신'</p>	<p>GPS 위치정보 및 무선통신장치, 압전발전기가 내장된 스마트 슈즈를 통해 치매노인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p>  <p>* 자료: 고양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p>
<p>어린이 안심통학</p>	<p>IoT와 Beacon 무선통신기술을 통해 어린이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p>  <p>* 자료: 창원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p>

더불어 방재 관련 서비스 역시 기존의 재난재해 대비·대응 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축산농가를 위한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예방 스마트서비스를 스마트도시 계획에 담고 있다. 이 역시도 지금까지 국가차원에서의 재난 대응 체계로는 부족했던 지역 특성이 반영된 재난 대응을 수준 높은 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p>하천 염도측정시스템</p>	<p>염도측정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농작물, 재첩 등 농수산물 피해 방지</p> <p>* 자료: 광양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p>	
<p>위해 조류 퇴치시스템</p>	<p>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음파를 이용한 위해 조류 차단</p> <p>* 자료: 평택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p>	

디지털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역량 강화로 재난 및 범죄 발생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더욱이 드론, 이동형 CCTV, IoT 등 장비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치단체 스마트도시 계획에서의 방재/방범 스마트도시 서비스 대부분이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초기 단계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도 매우 주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상황 발생 시 관의 빠른 대응 뿐 아니라 당사자 혹은 주변인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발굴도 필요하다.

## ▶ 교통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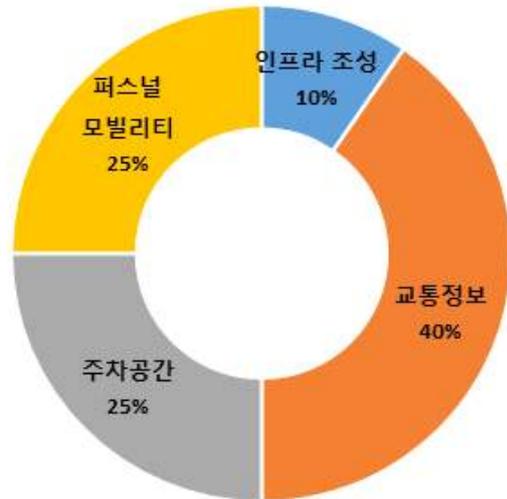
스마트 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과 스마트도시 조성에 발맞추어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보편적인 도시 문제 중 하나이며, 관련 산업 분야의 경쟁 심화로 빠른 기술 발전과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살펴본 10개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계획에서도 교통에 관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계획인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이를 계기로 테스트 및 실증을 위한 관련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구축 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만 다를 뿐 구축 예정인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조사 대상에서의 교통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①자율주행차,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교통환경체계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사용 가능한 주차공간 정보 제공 및 공유 등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 서비스, ③라스트 마일(last mile), 화석연료 절감 등을 위한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④교통흐름 제어, 사고 예방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제공 서비스 등이다.

새로운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주행 버스 운영을 위한 교통체계 및 장비 등 인프라 구축</li> <li>이동성 제한 극복을 위한 권역 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li> </ul>
주차 공간 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영주차장의 주차면 감지를 통한 주차가능 공간 정보 제공 서비스</li> <li>민간 주차 공간 공유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li> </ul>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 이동성 확보를 위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기차 등 공유 모빌리티 제공 서비스</li> </ul>
교통정보 수집·제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정적인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한 신호 제어 서비스, 교통량 정보 제공 서비스 등</li> <li>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제공 서비스</li> <li>교차로, 건널목 등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과속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신호등</li> </ul>

50개의 조사대상 교통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관련 서비스가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과 인프라 조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서비스의 경우 안정적인 교통 흐름과 보행자 사고 예방의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이지만, 기존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보다 무게 중심이 놓여있는 서비스이다. 다시 말해 기존 정책 서비스의 고도화 혹은 품질 제고일 뿐 스마트도시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새로운 교통환경 패러다임 도입과는 거리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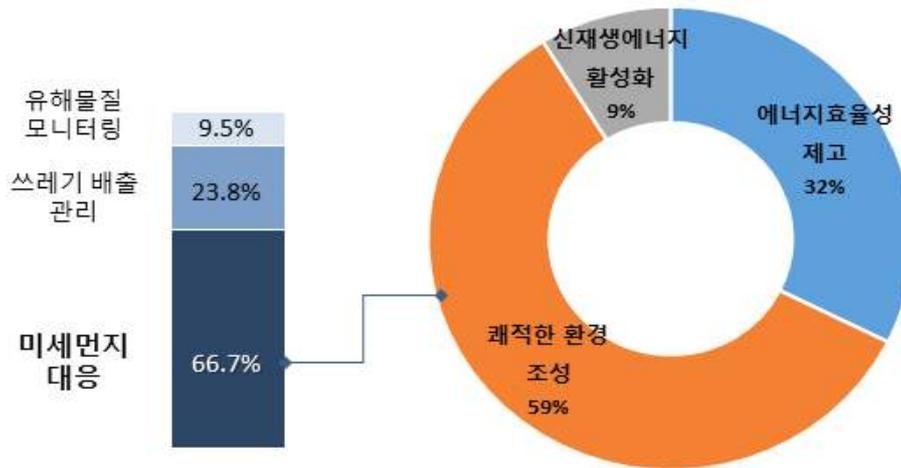
교통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명력을 보장해주는 핵심 인프라이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스마트도시 계획들은 모두 교통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여러 실험을 주민들과 함께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조사 대상인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교통 부문은 새로운 도전과 실험보다는 행정정보화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 환경/에너지/수자원 서비스

주민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 도시는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쾌적한 정주 공간 마련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화석연료의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서 역시 환경/에너지/수자원 서비스는 약 1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미세먼지 피해

의 정책문제화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 측면의 지능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IoT 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의 자치단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담겨있다. 다시 말해 아직은 미세먼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을 뿐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거나,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등을 차단하는 직접적인 문제해결 서비스는 부족한 상태이다. 예외적으로 부천시의 경우 ‘드럼형 도로 물분사 서비스’ 등 직접적인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부천시가 정부의 ‘스마트도시 R&D실증 도시’ 대상지역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에너지 통합관제 혹은 스마트가로등과 같은 에너지 고효율 시설·장비로의 교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서비스의 경우 일부만이 자치단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 등으로 제한적이다.

▶ 행정 서비스

행정 서비스는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내 서비스 목록 중 4번째로 높은 비중(10.8%)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의 행정 서비스는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행정 및 정책 서비스에의 IT 접목을 통한 고도화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공공 WiFi를 이용한 상권정보 제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WiFi 접속 된 로그기록을 유동인구 분석 시스템과 연계하고, 접속 위치 기반으로 인근의 상점정보를 제공하거나 방문자 통계를 상권에 제공</li> </ul>
유동인구분석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iFi로 수집된 로그기록을 바탕으로 유동인구에 대한 DB구축 및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li> </ul>
무인민원발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공서 근무시간에 제약 받지 않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li> </ul>
불법주차 자동안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절대주차금지구역에 대해 홍보와 계도 위주의 자동안내 서비스</li> </ul>
주정차위반차량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시간 자동 감지하여 단속경고를 하고, 단속영상 및 차량정보를 제공하여 견인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료 생산</li> </ul>
출산 및 보육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여성의 출산 전·후 시기에 맞춰 보건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임신, 출산, 보육에 관한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 제공</li> </ul>
통합공공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사용자 선택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li> </ul>
다문화 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취득과 취업지원을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의 사회 정착 지원</li> </ul>
지방세 안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신저를 통한 세금 알림수진 및 세무 상담,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li> </ul>
AI기반 24시간 자동 민원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민원상담 내용으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365일 AI를 통한 자동 답변 서비스</li> </ul>
청년일자리 지원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실업 해결을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하는 오프라인 서비스, 3D프린터 등이 구비된 작업공간, 공용회의실, 사무실을 제공</li> </ul>
생활편의시설 위치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위치를 다국어로 안내하는 서비스</li> </ul>
아파트 시정홍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통해 시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시정 및 안전, 기상 등의 정보를 제공</li> </ul>
시민참여 디지털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이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li> </ul>

스마트도시 행정 서비스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현재 자치단체들이 계획으로 수립해놓은 서비스들은 행정정보화의 범주로 구분해도 무방하다. 즉 기존 자치 행정 서비스를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들 서비스들은 자치단체가 5년 마다 수립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내용들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에 행정정보화를 스마트 도시 서비스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행정 부분 서비스를 기존의 행정정보화와 차별화된 새로운 범주로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 ▶ 문화/관광/스포츠 서비스

자치단체 스마트도시 계획에서의 문화/관광/스포츠 서비스는 대부분 지역의 관광 편의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AR/VR를 활용한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체험 서비스, 앱을 통한 관내 관광 및 상권 안내 서비스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업모델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다음, 네이버 등 종합포털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에서의 독자적인 앱과 서비스 개발은 상대적으로 범용성과 사용성이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지적 받기도 하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스마트도시는 주민의 편의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와 더불어, 외부와의 활발한 연계와 교류로 지속적인 투자와 소비를 유치하여 경제적 생태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관광/스포츠 관련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서비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지역의 문화/관광/스포츠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교통, 방범/방재 등 타 부문의 스마트서비스와의 연계로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는 방재/방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기존의 보편적 행정 서비스 제공의 사각지대 혹은 비효율적 서비스 체계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입되고 있다. 특히 센싱데이터를 기반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이동성이 낮은 주민 대상의 복지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한 시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민간 서비스 상품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웨어러블 기기와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연계한 모니터링 및 분석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공적 서비스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기본계획의 변화 필요성

국가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이후 중앙행정부처를 비롯하여 자치단체들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더불어 첨단기술을 통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토대가 되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다소 부족함을 지니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직접 체험하며 도시를 스마트하게 진화시키기 때문이다. 즉 도시의 정체성과 정합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설계하고, 지역 자원과 역량에 걸맞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까지의 자치단체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차별성 없는 보편적 아이디어들을 여러 자치단체에 적용해보는 실험 단계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동일한 도시문제와 동일한 문제 해결 수단으로 구성된 자치단체들의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은 스마트도시에 대한 기대와는 다소 차이가 난다. 최첨단의 기술로 자동화되는 미래의 도시를 계획에 담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검증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공공 정책 계획에서 합당하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정보화 혹은 지역정보화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의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